

2026년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일시재가·이동지원 업무협약서

대전광역시 동구청(이하 “동구” 라 한다)과 한밭사랑노인복지센터(이하 “협약기관” 이라 한다)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상생활돌봄서비스(일시재가 및 이동지원)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 적)

본 협약은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일상생활돌봄서비스(일시재가 및 이동지원)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

각 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.

1. 대전광역시 동구

- ① 사업 추진 전반 총괄
- ② 대상자 연계·의뢰 및 개인정보 동의 등 행정적 지원
- ③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

2. 협약기관

- ① 일시재가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- ② 돌봄 대상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 및 민원 응대, 직원 교육
- ③ 결과보고 제출 및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

3.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.

제3조(운영원칙)

- 1.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본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.
- 2. 제공기관은 동구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상시적으로 일시재가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계하고, 사고 등 민원 발생 시 조치해야 한다.

3.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사고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4.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

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 등과 같은 사항은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 등)

1. 본 협약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26년 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.
2.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양 기관은 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

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상대방과 협의한다.

제7조(협약이행)

본 협약서는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각 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. 3. 19.

한발사랑노인복지센터
센터장 지대운

지대운



대전광역시 동구
구청장 박희조

박희조



[뉴스쉐어=이수천 기자] 대전 동구는 지난 19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 돌봄 등 14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‘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’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.

이번 협약에 따라 ▲일시재가 및 이동지원은 판암사회복지관, 산내종합사회복지관, 선우노인복지센터, 한발사랑노인복지센터 ▲영양급식은 동구지역자활센터 차려드림, 새터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▲주거 수리·수선은 파랑새건축이 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또한, ▲청소·방역은 지역주민과함께사회적협동조합 ▲방문목욕은 잘섬김요양센터 ▲단기보호는 한남요양병원, 보니파시오요양병원, 해피엔젤요양센터, 그린요양병원, 원동요양병원 등이 참여해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, 구는 지역 내 병·의원 및 한의사회와 연계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,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돌봄로봇, 돌봄플러그, 홈케어링콜 등 스마트 돌봄사업도 함께 추진해 총합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.

박희조 동구청장은 “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구민의 삶을 돌보는 통합돌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,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제공된다.

<저작권자 ©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